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

양성일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최근 비혼을 선언한 청년들의 모습을 소재로 삼은 다큐멘터리에서 20~30대의 젊은이들이 결혼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들은 결혼, 출산, 양육이 자신의 사회생활과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고 출산, 양육을 선택할 경우 주거 문제, 교육비, 경력단절과 관련한 근로 문제, 독박 육아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결혼을 기피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현상이 되었다.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남녀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8.1%로, 2010년 64.7%에 비해 수치가 16.6%포인트 떨어졌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결혼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편,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6.4%로 2010년 40.5%에 비해 15.9%포인트 증가하였다. 결혼에 대한 태도와 견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왔다. 여러 부처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만들고 추진해 왔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경감,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아동수당 도입,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정책을 펼쳐 왔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를 지속적으로 확

대하였으며, 임신 중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한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용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는 보육 정책 및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는 성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임신, 출산, 양육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출생아수는 감소하였다. 2018년 3분기 누적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2018년 전체 합계출산율이 1.0명이 안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혼 건수도 줄고 있다. 3분기 누적 결혼 건수는 18만 6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2018년 전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출생아수 30만 명대 진입 시점이 통계청 추계보다 18년 앞당겨진 것이며, 2022년 이전에 출생아수가 20만 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및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 추세는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방면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소멸 등으로 이어져 국가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 추진해 왔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은 국가의 생산력과 경제성장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인구 규모를 우선시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관련 정책은 출산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국가 주도적인 목표 설정이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의 한계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정책 목표는 아이 낳기를 꺼리는 국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국가와 경제적 성장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았다. 임신·출산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차별을 경험하는 모습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었다.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보육과 돌봄, 그리고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적인 출산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정책 대상자들이 처한 어려움과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의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지난 12월에 발표하였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계층·성·세대 간 통합 등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결혼 가족, 다자녀 대상의 가족 관점을 아이 중심,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기존의 정책 과제를 정비하고 핵심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렇게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의 목표를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응'으로 설정하였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산,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일·생활 균형이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돌보는, 질 높은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현대사회에는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가족 관계에 대한 등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부모에 대한 포용적인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이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

다.

청년, 여성, 아동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자 한다. 일자리·주거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과 여성이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하고, 공교육을 강화하여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동수당은 보편적인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 체계로,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이다. 올해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아동까지로 혜택이 확대된다. 이는 아동의 건강하고 안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다. 아동이라는 정책 대상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아동과 아동이 속한 가족의 삶의 질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아동수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고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